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2호
2021년 6월

주요 이슈

주요국의 기후변화 규제 및 정책 동향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계획

ESG 동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동향
기후변화 리스크와 재무정보 공개 요구 확대

주요 통계



주요국의 기후변화 규제 및 정책 동향



민경희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아온 ESG 관련 이슈이다. 금년부터 파리 기후협정 체제가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①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8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489억 톤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2015년의 467억 톤보다 4.7% 늘어난 양이다.

EU와 미국의 배출량은 일정수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세계 최대 배출국으로 올라섰고, 인도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해 온 EU는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선언했다. 또한 2030년까지 1990년대 대비 탄소배출을 최소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고있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에 잠정 합의하면서, 탄소중립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했고, 2조 달러를 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청정·인프라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2020년 발표했던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및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인 탄소거래시장을 세우고, 탄소 다배출업체에 대해 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저탄소 경제구조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내용으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감축한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상향해 제출할 예정이다.

2018년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MtCO₂)



※ 자료 : Climate Watch

② 탄소 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 탄소가격제

EU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에 있다. 탄소가격제는 탄소 배출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자발적인 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이다. 기후변화의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한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배출권거래제(ETS), 탄소세(carbon tax), 탄소국경조정세(CBAM) 등이 있다.

배출권거래제(ETS)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이를 당사자들끼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탄소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2005년 EU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 배출권거래시장을 개장했다.

탄소세(carbon tax)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탄소 에너지를 쓴 만큼 세금을 부과해 자연스러운 배출량 감소를 기대하는 것이다.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조세 저항과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영국, 스웨덴 등 2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세(CBAM)는 국가별 규제 강도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량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EU는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커진 역내 기업 보호를 위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계획이며, 미국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규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자동차 배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이슈화되면서 EU와 미국, 중국 등은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거나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ESG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화두로 급부상한 것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기업들도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동향

유럽	미국	중국
유럽 그린딜('19.12) - '50년 탄소중립. 감축목표 법제화 추진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21.1) - '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제시('20) - '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05) * 전세계 총 거래규모의 87% 차지('20)	그린뉴딜 추진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11) - 금년중 전국 확대할 예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23)	주정부 단위 배출권거래제 운영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행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계획



배두현 선임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① 탄소중립 실현 現주소

지난해 우리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및 제거량을 일치시켜 순배출이 0이 되는 개념으로 '넷-제로(Net-Zero)'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28백만 톤을 정점으로 2019년 700백만 톤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까지 주어진 시간이 30년 정도에 불과해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우리나라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29.1%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11.0%), 프랑스(9.9%), 영국(8.8%)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중심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20.7%)이나 독일(20.4%)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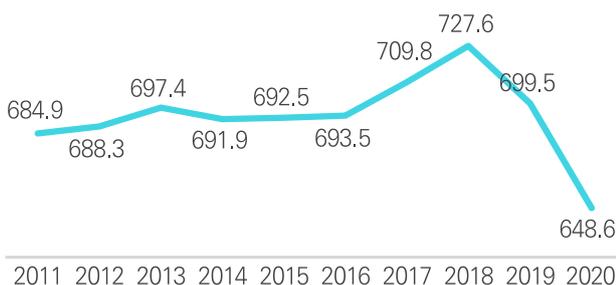
EU를 필두로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될 것이 명확해졌고,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과 자금조달 등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EU·미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가 현실화 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외 규제의 강화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탄소중립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MtCO₂eq.)



※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2018) (단위 : %)



※ 출처 : 통계청(미국은 2017년 통계임)

② 탄소중립 추진계획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량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①경제구조의 저탄소화, ②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수소 및 전기차의 생산과 보급을 늘리는 한편, 거주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디지털 기술 강점을 살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효율화 장치·이산화탄소 포집(CCUS) 기술 등 혁신기술을 산업화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철강산업 등에서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도 계획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석탄발전·내연기관차 등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산업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일자리 수고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인식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전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3대 정책 방향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10대 과제	① 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 고탄소산업구조 혁신 ③ 미래 모빌리티 전환 ④ 도시·국토 저탄소화	⑤ 신유망 산업 육성 ⑥ 혁신생태계전환 구축 ⑦ 순환경제 활성화	⑧ 취약 산업·계층 보호 ⑨ 지역중심탄소중립 실현 ⑩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자료 : 관련 부처 합동('20.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동향



김민성 연구원

올해부터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기후 정상회의와 P4G 서울회의가 개최되었고 연말에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가 예정되어 있다.

① P4G 서울 정상회의

최근 50여개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P4G 서울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17년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2년 단위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에는 ▲녹색 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 노력,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정부도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개도국들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11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② 기후 정상회의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전세계 40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가 개최되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20여 개국은 2030년까지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기로 했고, EU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30년 감축 목표치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크게 상향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중국과 3~4위 국가인 인도, 러시아는 공동 협력에는 동의했지만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P4G 서울 정상회의 개요

기간	2021년 5월 30일 ~ 5월 31일
주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서울선언문 주요내용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내 억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문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3대 환경문제* 대응 *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존목표	기후 정상회의 발표내용
미국	'25년까지 '05년 대비 26~28% 감축	'30년까지 '05년 대비 50~52% 감축
EU	'30년까지 '90년 대비 40% 감축	'30년까지 '90년 대비 55% 감축
일본	'30년까지 '13년 대비 26% 감축	'30년까지 '13년 대비 46% 감축

기후변화 리스크와 재무정보 공개 요구 확대



이진 연구원

최근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글로벌 녹색금융 협의체(NGFS) 가입을 신청했다.

① 기후변화 리스크와 재무정보 공개 요구

기후변화는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우나 해수면 상승으로 사람이나 시설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노동 및 자본의 생산성 저하 등 간접적으로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실물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부문으로 파급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되거나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 실적 악화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출범한 TCFD는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개 분야에서 정보공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우리정부도 TCFD의 정보공개 권고안 지지를 선언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및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 등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금융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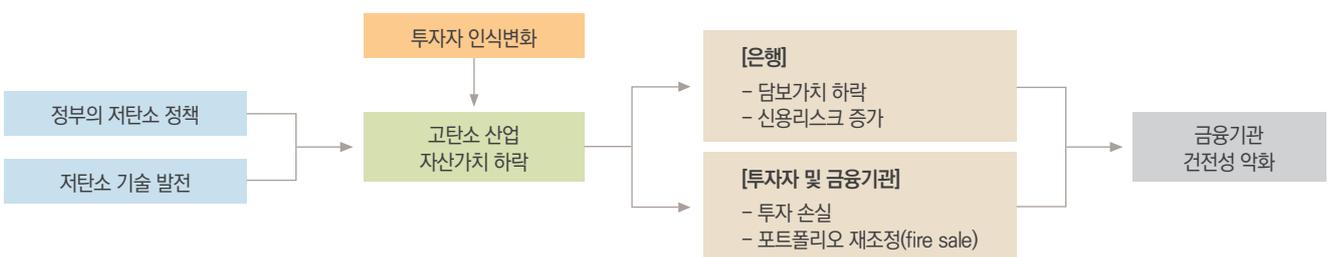
지난 5월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인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가입을 신청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NGFS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된 협의체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70개국 9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NGFS는 권고안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 건전성 감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요소를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적용하며, TCFD 정보공개 권고안을 지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NGFS 가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감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들도 투자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 파급경로



※ 출처 : TCFD, 한국은행

ESG 통계 지표

2021년 5월말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8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녹색채권	3	21	31	43	55	69	85	94
사회적채권	1	178	471	488	505	538	572	599
지속가능채권	1	8	44	46	58	69	93	113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잔액

(단위 : 천억 원)

	2018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녹색채권	6	21	30	43	57	72	90	103
사회적채권	3	246	736	766	786	847	918	979
지속가능채권	4	21	54	56	74	80	99	105

2. ESG 평가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S	A+	A	B+	B	C	D	총 기업 수
환경	-	10	58	100	221	169	202	760
사회	-	68	82	175	253	179	3	760
지배구조	-	7	96	191	260	141	18	713
금융 지배구조	-	5	7	17	13	5	-	47

* 2021년 1,2차 등급 조정 결과 반영

3. 기타 통계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 기업 수

(단위 : 개)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한국 지지 기업수	-	4	2	12	28	46
글로벌 지지 기업수	283	299	377	729	472	2,160

2021년 ESG 뉴스레터 주요 이슈 목록

5월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9월	ESG 경영 전략 Supply chain과 ESG
6월	주요국의 기후변화 규제 및 정책동향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계획	10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7월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11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스톡홀름 코드와 주주행동주의
8월	글로벌 ESG 평가 기준 및 특징 한국의 ESG 평가 및 특징	12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주요국의 기후변화 규제 및 정책 동향

민경희 연구위원
T. (02)6050-3137 | E. kmin@korcham.net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계획

배두현 선임
T. (02)6050-3142 | E. doohy@korcham.net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동향

김민성 연구원
T. (02)6050-3139 | E. mskim62@korcham.net

기후변화 리스크와 재무정보 공개 요구 확대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

ESG 통계 지표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kim@korcham.net